



2004년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 국가발전과 대학의 역할 -



▲ 2004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국가발전과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04년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7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회원대학 총장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첫째 날에는 박영식 대교협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서,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에 대한 강연 및 총장과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오후에는 대학사회의 현안과제인 ‘산업인력 양성과 대학의 역할’(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대학의 역할’(임상규 과학기술부 차관)에 관한 분과별 주제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 둘째 날에는 ‘학생부족 시대의 대학

재정 문제와 전망’(함기선 한서대 총장), ‘M&A시대의 대학구조조정 추진전략’(김재기 순천대 총장), ‘청년실업과 대학의 역할’(박길상 노동부 차관), ‘NURI 사업의 성공을 위한 과제’(이상천 영남대 총장), ‘지방교육 지원·봉사 사례와 전망’(김성영 성결대 총장)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국·공립대학 분과’, ‘사립대학 분과’ 등 대학특성별 분과토의도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대학교육』에서는 이번 2004년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분과토의의 주제발표 중 ‘산업인력 양성과 대학의 역할’,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대학의 역할’, ‘청년실업과 대학의 역할’에 대한 발표문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주제발표 1

산업인력 양성과 대학의 역할

I. 산업기술인력수급 현황 및 문제점

1. 부문별·학력별 인력수급의 괴리

- 청년·고학력 실업과 기술인력 부족의 이중구조
-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 및 인력양성 체계
- 산업기술인력의 수급이 시장원리에 따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산업별·직종별·학력별 인력수급이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 산업기술인력수급 전망체계 구축
 - 대학 등의 인력양성이 산업계의 수요에 맞도록 탄력적 교육체계 구현
 -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특수한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의 인력양성 투자 확대 추진

2. 산업기술인력의 질적 불균형

- 대졸 기술인력의 기술수준 미흡으로 산업계 불만 및 불필요한 인력개발투자 초래
- 산·학 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미흡
- 대학교육이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할 수

- 있도록 공학교육체계의 혁신을 촉진지원
- 공과대학 중심으로 산·학 협력에 특화된 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대학의 체제변화를 유도
-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수한 산학협력 교육모델을 전국 공과대학으로 확산·보급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 산업계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에 대해 첨단 신기술에 관한 지속적인 이론 및 실습 등의 재교육 체계 구축

3. 예비 산업기술인력의 질적 수준 저하

-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진학 감소와 학력수준의 저하
-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진출 촉진대책과 함께,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학교 단계에서부터 직업단계에 이르기까지 이공계에 대한 각종 유인 및 지원 대책을 발굴·추진
 - 창의적이고 수준높은 교육을 통해 이공계 대학생들을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단계
 -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문화확산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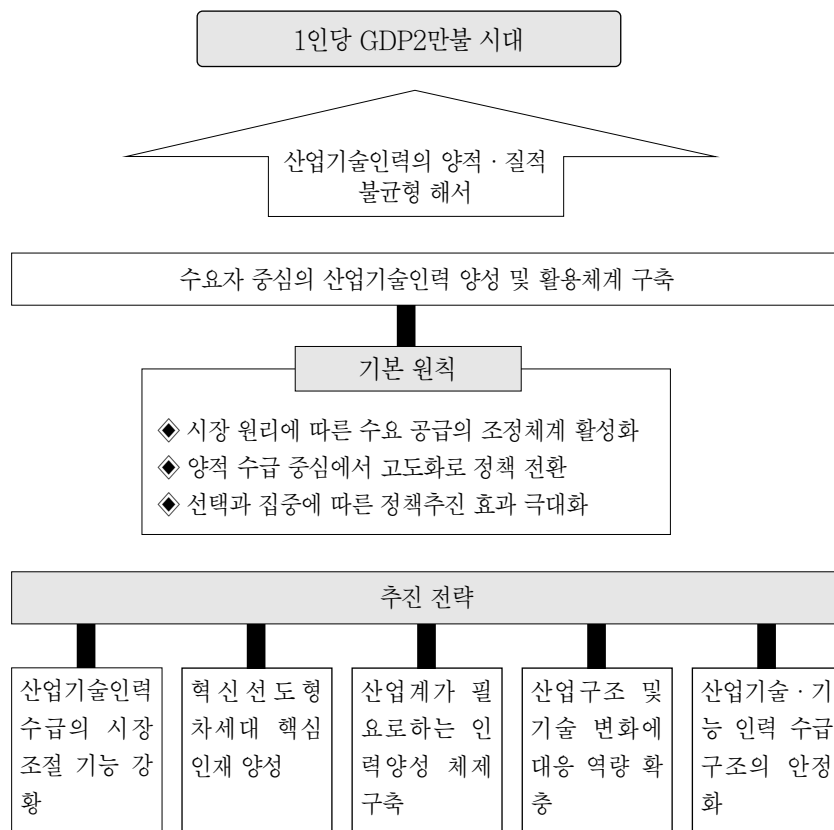
4. 산업기술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 산업기술인력의 지역간 격차로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장애
-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내 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체계 구축이 시급

- 지방의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에 대한 선택적·전략적 지원 필요
- 지방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교육체제 개편을 동시에 촉진

II. 산업기술인력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

1.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2. 주요 정책과제

1) 산업기술인력수급의 시장 조절기능 강화

- 기존의 각종 인력관련 통계가 조사·발표

되고 있지만, 산업기술인력 수급을 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에는 한계-수요자인 산업계 중심의 업종별·기술별 접근이 필요

-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ector Council)를 확대 구성하여 수요와 공급 부문간 인력양성의 동적 균형 달성 도모
- 국가기술인력지도, 산업기술인력수급통계 등을 통해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수급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2) 혁신 선도형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① 차세대 성장동력 선도 핵심인력 양성 지원

- 산업의 Cash-Cow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력기간산업분야의 우수기술인력 유입도 감소하고 있어 경쟁력 제고에 장애
-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산학 연계형 통합 대학원과정을 설치·지원
- 공학분야에서 세계적 기술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최우수 실험실을 선정·지원
- 조선, 철강 등 주력기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한 석·박사 양성 지원

②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우수인력 양성 지원

- 지역산업과 연계되지 않은 지방대학에 대한 양적 지원 위주의 투자는 성과도출에 한계
- 장기적으로 지방대에 재학중인 이공계 석·박사생 3만여 명의 10%인 3천여 명의 우수 석·박사를 양성(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의 지원규모를 500억 원까지 확대)
- 4개 지역산업진흥 2단계 사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특성화된 현장기술인력과 전문 인력 양성 지원 확대

③ 우수한 여성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 공공부문의 적극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등 민간부문에서는 여성기술인력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부족
-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뿐 아니라, 기술개발사업과 기반구축사업 등에도 여성우대정책(할당제 및 우대가점) 적용
-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회 구성시 여성 참여비중 확대
- 여성공학기술인협회 등과 공동으로 여성기술인력의 산업기술분야에 대한 인식제고 및 사회 진출 확대사업 추진
- 산업기술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여성채용 확대를 촉진

3)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체제 구축

① 산업기술인력양성체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산업현장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실무능력을 보유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방식에 산학협력체제 도입이 필요
- 교육부와 공동으로 광역권별로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육성하여 산업집적지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인력양성체제 구축
- 민간 주도 공학교육인증체제의 확산·지원('03년 9개→'08년 전체의 1/2)을 통해 공학분야의 교육체제 혁신을 유도
- 현장실습학점제('03년 9개 대학→'04년 20개 대학), 창의적 종합설계, CEO 공학교육지원사업 등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지원 확대
- 국내외의 우수한 산학협력 인력양성 모델을 대학 및 산업계에 확산·보급하기 위

한 통합 D/B 구축

- ② 산업기술인력양성체제의 질적 수준 제고
 -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과 함께 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 산업계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인 우수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과정(교재, 교육방법 등) 개발·보급
 - 공학교육인증제도 확산을 통해 공대 학생의 전공과정 이수를 확대하고(48학점→64학점) 공학교육의 전문성을 강화

4)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에 대응역량 확충

- ① 산업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체제 활성화
 -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우수 인력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업체 근무 기술인력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 추진
 - On-Line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기회 확대
 - 구조조정 및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실업상태에 있는 경력직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직업알선 연계체제 구축
- ② 산업교육체제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 실업계 공업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및 중등·고등교육간 연계교육체제 도입방안 검토
 - 산업대학 중에서 일반대학과 경쟁을 통해 특성화가 가능한 대학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여 산업기술인력의 평생교육기관화
 - 산업교육체제의 성공모델을 구축하기 위

하여 '산업기술고등학교'를 설립 추진

5) 산업기술·기능인력 수급구조의 안정화

- 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인력난 해소 지원
 -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직무기피요인 해소 장비 개발 및 보급 확대
 -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등의 중소기업 배정 확대를 통해 우수 기술인력난을 해소
 - 정보화 전문인력, 전담 수출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족한 전문인력을 공급
 - 국민주택 특별분양, 근로자 세제지원, 고급 기술직 채용장려금 지원, 해외 고급기술인력 도입 지원 등 추진
- ② 단기적 취업지원대책과 사전적 실업방지 대책 병행 추진
 -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및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등 고용촉진 지원
 - '청년채용 패키지사업',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및 고용 지원(중기청)
 - 국내 진출하는 외국 R&D 센터가 이공계 석·박사생에 대해 2년간 인턴쉽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건비의 50%까지 지원
 - 장기적으로는 사후적·직접적 취업지원보다 현장실습학점제(인턴제), 현장실무능력교육 강화 등 사전적·간접적 지원으로 전환

주제발표 2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대학의 역할

I. 이공계 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서 자연계열 지원자 수의 감소
-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 기피
- 외환위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공계 인력 감축 및 연구비 감소
- 양적, 수준별·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 발생
- 이공계 인력의 유동성 부족
- 우수인력 실업률의 증가 및 비정규직의 문제
- 국가발전 기여도에 비해 낮은 보수와 사회적 위상
-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재양성 체제
- 흥미도를 제고하지 못하는 초·중등 과학 교육

II. 이공계 핵심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

1. 초·중등 과학교육 단계

- 과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과학영재 육성과 대입전형제도 개선
- 과학교육 인프라 확충

2. 대학교육 단계

- 이공계 대학구조의 혁신

- 학문영역간 경계 탈피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탐구
- 중단없는 교육을 위해 병역대체복무제도 확대·개선

3. 사회진출 단계

-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을 스타연구원으로 육성
- 창의적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 과학기술인의 사회진출과 경력개발을 지원
- 해외 첨단기관의 선도적인 지식과 경험 전수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활용 촉진

4. 이공계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 과학기술인력 수급계획 수립
- 차세대 성장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조정

III.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대학 및 정부의 역할

1. 현황 분석

1) 인력 현황

- 박사급 인력의 72%가 대학에 집중되어 있어 고급 지식의 생산·확산 역량 충분
- 대학에 상주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인력 보강이 필요

2) 연구개발비 현황

- '02년의 경우 전체 연구개발비(173,251억

- 원의 10%를 대학이 차지(17,971억 원)
 - 대학의 연구잠재력에 비하여 투자는 부족한 형편
- 3) 강점과 기회요인
- 연구발표 등 기초연구의 양적인 기반이 양호
 - 대학교육 기회의 대폭 확대로 풍부한 인적자원 배출
 - 박사급 인력의 대학집중(72%)으로 연구잠재역량 풍부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확대 및 구조조정 공감대 형성
 -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범정부적인 지방대학 육성 의지
 - 지식정보화에 따른 성인의 계속교육 수요 증가
- 4) 약점 및 위기요인
-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원, 시설 등 교육여건 취약
 - 연구성과의 질적인 수준이 미흡
 -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의 보강이 필요
 - 대학과 기업, 연구원과의 인력교류가 저조하고, 인력이동이 대학쪽으로 편향적
- 5) 대학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
- 기초 연구개발사업의 지속적 확대
 - 매년 정부R&D 예산대비 기초연구비 비율을 1%p이상 증액
 - 대학의 연구비중 기초연구비 비중 제고('02년 37.1%, 미국 65.3%)
 -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 추진
- 창조적 혁신역량 지원을 위한 사업 확충
 -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개인·소규모 연구사업 지원
 - 연구역량 및 잠재력이 큰 중·대규모 우수연구집단 육성
 - 대형 고가 연구장비의 전국적 공동활용체계 구축

2.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 1)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혁신
- 주문식 교육, 산·학·연 협약, 학제적 협동과정 개설 등 다양한 방식의 현장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체험·실습·현장교육의 활성화로 대학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개선
 - 지역별, 대학별로 특성화분야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개설
 - 산·학이 연계된 연구중심대학을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의 혁신 주체로 육성
 - 교육·연구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을 선정·지원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
 - 연구 잠재력이 탁월한 학부, 학과를 특화하여 육성
 - Post BK21, 산업대학, 지방연구중심대학 사업 등을 연계
 - 산업계 등이 요구하는 학습 분야를 중심으로 심화된 내용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
 - 기존 학과체제를 탈피한(기술과 경영, 기술간 융합분야 위주) 교육과정을 산업계와 공동으로 개발·운영

2) 적극적, 자율적인 경영전략 도입

- 대학내 독립적인 교육과정 활성화
 - 단과대학, 학부 등 독립단위의 자율경영 방식을 활용하여 학문 영역별로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필요
- 학부제 및 모집단위를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 적용
- 백화점식 양적 팽창을 탈피하고 특성화·전문화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추진
- 학·석사 통합과정 확대, 공동학위 수여 등 학사운영의 다양성 제고
-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존도를 감소
 - 기업 등과 상시 교류하며 신규사업과 연구를 발굴·제안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3. 정부의 역할

1) 대학의 생산적인 기초연구기반 조성

-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투자 중 대학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15% 준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 우수한 개인과 연구그룹에 대한 지원 강화
- 대학내 산업체·연구소가 참여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립을 지원(세계, 금융 등 인센티브)
- 우수한 석·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와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 지원 및 기숙사(기혼자 숙소 포함) 등 생활여건 개선 지원

2) 첨단 다학제·복합기술분야 기술개발 역량 강화

- 우수한 연구 능력을 지닌 과학자들이 한 차원 높은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
- SRC / ERC / NCRC 등 관련 사업 추진 시 차세대 복합기술분야 인력양성 중심으로 운영
- 대학부설 연구소를 기초과학 전공자의 연구능력 제고 및 첨단 연구인프라 구축의 거점으로 육성

3)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대학 연구지원 촉진

- 단기·소규모과제 지원에서 중장기·대규모과제 지원으로 전환하고, 연구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 교수의 특허발명, 연구개발기술의 실용화에 따른 대학 및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 국가연구과제 지원시 대학여건에 따라 간접연구비 증대

4) 효율적 산학협력을 위한 조정자 역할 강화

- 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산학연간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 산·학 협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5) 산·학·연 교류촉진 기반 조성

- 산·학·연 인사교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 민간(연)·출연(연)·대학간 인력 교류시 발생하는 연금상의 불이익을 해소함으로써 인력교류의 활성화 유도

- 국내 Post-doc의 산업계 연수기회를 확대
- 인력교류 지원을 위한 파견협동연구 프로그램 운영

주제발표 3

청년실업과 대학의 역할

I. 노동시장의 동향과 문제점

1. 고용동향

- 금년도 연평균 실업률은 세계경제와 국내 경기의 회복으로 '03년(3.4%)보다는 다소 낮은 3.2%로 전망(노동연구원 분석)
 - 4월 실업률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3.4% 수준으로 낮아짐
 - 취업자수도 '03.11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청년실업률은 7.6%(376천명)로 전월(8.8%)에 비해 다소 완화된 상태이나, 계속된 경기침체·인력수급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로 높은 수준을 유지

2. 최근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는 추세
 - 거시경제측면에서는 잠재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

- 고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59.3%, '03)
- 노동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 심화
 - 고학력화에 따라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직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인력은 부족하여 청년실업자 양산
 - 청년층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직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 사용 등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이 상시화되는 경향
-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
 - 직업지도·직업정보 등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으로 취업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잦은 직장이동을 초래

II. 대졸자 등 고학력자 취업실태

1. 대졸자 취업실태

- 경기침체 지속 등 고용여건 악화로 신규 채용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대졸자 취업난 악화
 - '03년 4년제 대졸자 취업률은 59.2%수준이나, 진학자와 입대자를 뺀 순수취업률은 51.5%에 불과하며, 지방대생의 취업은 수도권 소재 대학생의 절반에 불과함
- 고학력 젊은 여성들의 사회진출 욕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취업기회가 따라주지 못함
 - 전체 여성실업자 중 대졸이상 여성실업자 비중이 증가('98: 18.9% → '03: 24.8)
- OECD 등 선진국들도 청소년 실업이 심

각한 상태이나 선진국은 저학력·저소득 청소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문대졸 이상 등 고학력 실업이 사회문제화

- 국가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의 토대를 약화
 - 청년실업은 미래 세대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반실업에 비해 심각한 문제

2. 대졸자 등 고학력 실업의 원인

1) 공급측면 : 양적 증가와 질적 저하

- '95년 이후 대학설립이 늘어나고('9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대학진학률이 증가하면서 대졸 청년인력의 공급이 크게 증가 반면, 대학 졸업생은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좋은 일자리만을 추구하는 경향
- 특히, 대졸 인력의 질적 수준은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
 -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률이 50%('03년) 수준에 불과하나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기술직 등 고급인력은 부족
 -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학과별 정원 과 교과과정 등의 탄력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수요측면 : 버젓한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 선호

-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경우 구조조정, 비용축소 노력 등으로 인해 청년층 일자리 감소
- 고용흡수력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보수와 근무환경이 취약하여 대졸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3. 대졸자 실업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청년층의 취업의지와 근로의욕을 약화

Ⅲ.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1. 기본방향

- 청년실업은 경제성장 둔화,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고용흡수력 저하 및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
-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육성, 학교에서부터 직장까지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고용 인프라를 완비하는 중장기 대책 추진
- 중장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3~4년간 청년들이 취업의사와 능력을 잃지 않도록 연수·직업훈련·일자리제공 등 단기대책도 대폭 확대

2. 주요내용

1) 단기대책

- '04년중에 5,287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14.3만 명의 청년에게 일자리, 연수·훈련기회 등을 제공
 - 해외근무 경험기회를 확대 제공
 - 민간기업의 채용촉진을 지원

- IT 직종 등 취업유망 분야(12천 명)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 고용안정센터에 '청년취업지원실'을 설치(34개소)하여 직업지도 등 각종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윈스톱으로 제공

- 특정학과·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 제조·판매 및 용역 제공이 가능한 학교기업 제도를 도입
- 시설·기자재·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내에 지자체·출연연구소·기업 소유의 협력연구소를 유치

2) 중·장기 대책

■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로 제조업의 일자리를 유지
 - 동북아 물류중심 구현, 동북아 R&D·금융허브 기반조성 등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성장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방의 일자리창출에 노력
- 일자리 나누기와 서비스산업의 육성
 -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에 따른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문화·관광·레저 산업을 활성화
- 중소기업 육성과 인력양성기능 강화
 - 직업환경 개선, 근로유인 부여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유도
 - 인력양성과 능력개발 강화

■ 산학협력 강화

- 대학교육을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
 - 대학의 학생정원, 학과(전공), 교육과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학과·학부를 운영하는 주문형·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시행
- 기업활동과 대학교육의 연계 강화

■ 청년취업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화

- 직업지도 강화
 - 모든 청년이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층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탐색 능력 배양을 지원
- 청년고용 인프라 구축
 - '06년부터 세부직업별로 중장기(5년) 인력수급 상황을 전망할 수 있도록 모델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01~'05)
 -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된 노동시장 관련 정보를 통합·표준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07년까지)

■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고용확대 방안

- 민간의 일자리창출에는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정부부문에서 일자리 제공 확대('04년부터)
- 공기업, 출연연구소 등은 경영여건, 인력운용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신규 채용을 실시
- 민간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책 강구

IV.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대학의 역할

1. 현황

-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진학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산업수요와 인력양성 체제와의 괴리로 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이 미흡
- 백화점식 학과개설로 특성화가 부족하고 산학연계 및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 미흡
-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취업지원실)가 있으나 인력 부족 및 전문성 미흡으로 취업정보 제공 수준에 불과
- 경력직 선호 등 채용관행 변화에 따른 학교 차원의 노력 미흡

2. 대학의 역할

- 노동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재양성
 -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노동공급측면에서의 인력양성도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에 맞게 이루어질 필요
 - 대학의 학생정원, 학과(전공), 교과과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산학 연계 교육 강화
 - 학생들이 재학 중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채용관행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산학 연계 교육 강화
 - 주문식 교육, 연수제, 산업체 체험학기제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연수제 학점 인정, 학제, 휴학요건 등 학사운영을 유연하게 운영
- 대학의 취업지원 체제 강화
 - 앞으로 대학에 대한 평가는 입학성적보다는 배출되는 졸업생의 질적 우수성과 취업률에 의하여 평가될 것임
 - 취업담당 부서 조직 확대와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하여 학생에게 전문적인 취업상담과 적절한 진로지도를 제공
- 고용안정센터와 대학간 취업지원 연계 강화
 - 고용안정센터와 학교취업지원 담당부서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
 - 현재 설치중인 종합센터의 '청소년취업지원실'을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체계 구축
- 졸업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졸업자에 대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미취업 졸업자에게는 재교육을 통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하고, 지속적인 취업정보를 제공
 - 취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종 사업체의 정보를 쉽게 확보하고 이를 미취업자와 연계할 수 있는 가교 마련 